

과 표외, 노인아파트 등을 벗어나서 유권자 등록을 받는 가두·방문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가주에서 5,000여명의 한인 유권자를 추가로 등록시키고 전국적으로는 1만여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KAC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투표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된 유권자 선거 안내책자 '알기 쉬운 유권자 가이드' 3만여부를 발행,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KAC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 시민권자 수는 대략 20만명으로 추산되나 등록된



한미민주당협회·한미공화당협회, LA한인회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이 19일 KAC 사무실에서 올 대선에 대비한 유권자등록 캠페인을 발표하고 있다. <홍재철 기자>

미국서 일제 반인류범죄 고발

정신대 피해자 연방법원 소송 의미·반응

재판관할권 여부 초점, 주요언론 관심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짓밟았던 한국 여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8일 제기한 소송은 미국에서 제기된 첫 번째 '정신대 소송'이자 일본의 반인류범죄를 다루기 위해 미국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란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을 세계주요 언론들이 주요뉴스로 취급,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소송의 최대 걸림돌은 재판관할권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 과연 미국법정에서 다뤄져야 하는 법적 당위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가 해당 법정에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변호인단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한 미국 행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출신 미국 시민권자를 대표원고에 합류시키는 전략도 검토중이다.

또한 피해 당사국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당당한

입장을 취하느냐와 이들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제기에 대해 주미 일본대사관 공보관의 1등서기관 히카리코 오노 공보관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일본정부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P, CNN등 방송·통신사들은 18일 소송제기 사실을 곧바로 세계에 알렸으며 워싱턴타임스, LA타임스등은 19일자 신문에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과 교토통신등 일본언론도 특과원들을 보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으나 미국언론에 비해 작게 취급, 대조를 보였다. <황성락 기자>